

김정은의 ‘대한민국 주적’ 규정 및 중요군수공장 현지도 분석

홍민(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2024. 1. 11. | CO 24-05

북한의 1월 10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당총비서가 1월 8~9일 중요군수공장을 현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번 현지도를 통해 “전쟁준비 강화” 차원에서 “압도적 힘의 지속적 비축”을 피력하며 중요 무기체계들의 본격 생산, 생산공정 확립, 생산능력 확장, 개건 현대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할 것과 “주적으로 단정”하며 이에 대응한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억제력 강화를 밝혔다. 지난해 연말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식 통일논의 접근의 실패를 인정하며 ‘남조선’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한 직후, 이번 현지도를 통해 김정은은 직접 “주적” 규정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김정은의 직접 규정은 곧 당의 방침이자 정책화란 점에서 향후 대남 초강경 행보가 군사행동을 비롯해 다양하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글은 중요군수공장 현지도에서 발견되는 특징, ‘주적’ 규정의 의도, 향후 행보에 대해 분석·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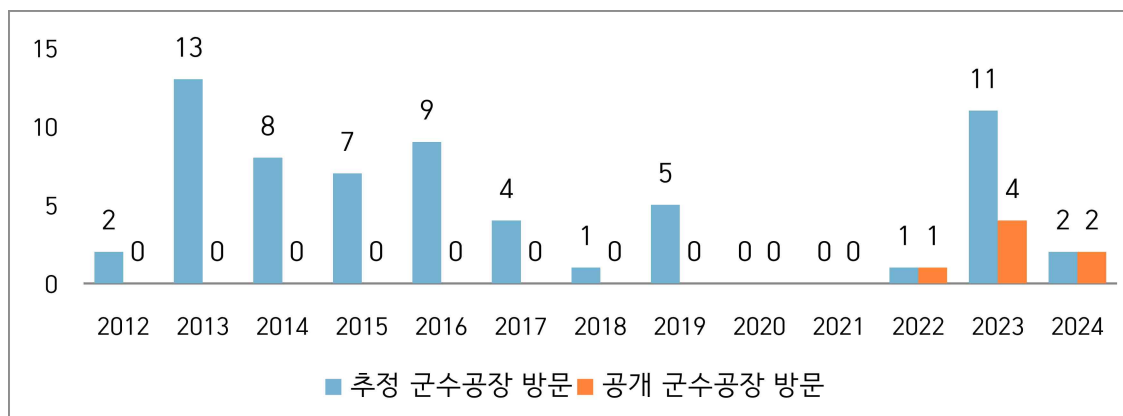
공개화된 군수공장 현지도 패턴화, 군수생산 능력에 대한 대외적 과시 행보 차원

김정은은 이번 현지도를 포함 2022~2024년 사이 총 여섯 건, 총 14개의 공장을 공개 현지도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군수공장 현지도는 개별 공장 방문 건수로 따지면 총 57건이다.¹⁾ 공식적으로 ‘군수공장’이라고 밝힌 여섯 차례 보도(총 14개 공장 방문)를 제외한

1) 방문 단위 건수는 여러 군수공장을 날짜를 달리하며 현지도한 후 하나로 묶어 보도했을 때, 보도 ‘건수’로 1회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도 내에서 여러 공장 단위를 방문했을 경우 각 공장 1개를 방문 건수로 집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43건은 군수공장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군수공장으로 알려져 있거나 추정되는 공장들이었다. 2022년 1월 28일자 노동신문에서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밝힌 이후, 군수공장 현지지도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무기의 양산체계를 메시지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림 1> 김정은 공개활동 중 군수공장 현지지도 방문 단위 건수



출처: 저자 작성

전략무기 실전화와 양산체계 집중 강조 및 군수생산에서의 결함 지적

김정은은 이번 현지지도를 통해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군수생산목표의 성과적 달성, 중요 무기체계들의 생산 본격화,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생산공정의 확립, 생산능력의 확장, 개건 현대화 목표 실행 등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군의 현대화와 ‘대량생산’ 관련 군수공업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시기별 특징으로 구분해 보면, 제1차 핵무기 고도화(2013~2017), 제2차 핵무기 고도화(2019~현재)를 거치며 실험·개발 → 실전화·훈련 → 양산체계 등으로 강조점이 이동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3년차였던 지난해와 4년차에 돌입하는 올해 실전화와 양산체계를 집중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 『노동신문』에서 ‘군수공장’이라고 밝힌 현지지도

보도일자 (방문일자)	공개활동 장소	수행자
2022.1.28.	중요무기체계 생산 군수공장(함남 추정)	김여정, 김정식, 조용원
2023.8.6. (8.3.~5.)	초대형대구경방사포탄 생산공장	조용원, 김재룡, 조춘룡, 김여정, 박정천, 김정식, 홍영철, 김영학

	약전기구공장 확장 건설현장	조용원, 김재룡, 조춘룡, 김여정, 박정천, 김정식, 홍영철, 김영학
	저격무기 생산공장	조용원, 김재룡, 조춘룡, 김여정, 박정천, 김정식, 홍영철, 김영학
	전략순항미사일, 무인공격기 엔진 생산공장	조용원, 김재룡, 조춘룡, 김여정, 박정천, 김정식, 홍영철, 김영학
	전략무기 대형발사대차 생산공장	조용원, 김재룡, 조춘룡, 김여정, 박정천, 김정식, 홍영철, 김영학
2023.8.13. (8.11.~12.)	전술미사일 생산공장	조춘룡, 김정식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대구경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	
2023.9.3.	복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와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	조용원, 김재룡, 조춘룡, 김여정, 최명철
2024.1.5.	중요군용대차 생산공장 현지지도	조춘룡, 조용원, 리일환, 김여정
2024.1.10. (1.8.~9.)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	조춘룡, 강순남, 오수용, 김정식, 김여정, 장창하

출처: 저자 작성

이번 현지지도는 조춘룡 군수공업부장, 강순남 국방상,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 군수공업 및 국방행정 핵심 간부들이 대거 수행했다. 군수생산 독려도 있지만, 중요 무기체계 생산에서 제기된 ‘결함’을 확인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을 수 있다. 이번 보도에서 “군수생산조직에서 발로되고 있는 일련의 결함들을 지적”하고 “전문성, 자립성, 공장능력과 현행정책대상우선시 원칙에서 다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절할 데 대한 과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1~2년 사이 주요 무기의 대량생산의 체계가 가동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종의 무기체계를 동시에 개발하고 실전화를 위한 양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떤 무기를 우선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현행 정책 대상 우선 원칙), 지도부서, 개발부서, 실전화 부대 요구 등이 혼재하는 문제, 여러 종 무기의 양산에 있어 공장별 생산 분업 문제 등이 걸리면서 지시의 과다, 생산 과부하, 전문성 문제, 재정 문제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냉전 시기 소련에서 무기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서 나타났던 지도부의 현실을 무시한 의사결정, 개발과 생산 연계에서 나타난 과부하, 군수생산 배분의 비체계성 등의 현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북한은 2019년 이후 개발된 다종의 근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실전화를 위한 양산의 내부 수요와 러시아 무기 지원 수요 등이 겹치면서 기존 생산능력의 한계 및 체계적 생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형전술유무기 발사대차량 공장 공개, “남조선 영토 평정” 사용 전술핵 양산 과시 목적

이번 군수공장 현지지도 사진에서 공개한 발사대차량은 북한이 2022년 4월 17일과 2023년 3월 10일에 노동신문을 통해 실험과 훈련 사진을 공개했던 신형전술유도무기이다. 이 미사일은 전선장거리포병부대용 근거리미사일(CRBM)로 2022년 4월 실험 당시 “전술핵운용의 효과성”과 “핵전투무력” 강화로 목적을 설명하여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로 볼 수 있다. 2023년 3월 훈련 당시에는 적작전비행장 주요 요소를 가상해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미사일은 <화성-11라>형이란 이름으로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한 바 있으며, 사거리는 150~200km로 탄두 구경이 KN-23 구경과 유사하여 KN-23의 개량형 계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현지지도 관련 노동신문 보도에서 공개된 발사대차량 사진



지난 1월 4일(보도 5일)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대차량 생산공장 현지지도에 이어 신형전술유도탄 발사차량 생산공장을 방문한 것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근거리탄도미사일도 양산체계에 이미 돌입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023년 12월 31일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강조했다던 유사시 “남조선 영토 평정”에 사용될



무기의 보유 및 대량양산이 이뤄지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된 방문으로 보인다. 특히 “제1선 대연합부대들과 중요 미사일부대들에 대한 신형무장장비배비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휴전선 후방 제1선 전선부대에도 신형전술유도무기가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비쳤다. 전선에 배치할 경우 150~200km 내에서 서해측으로는 대전, 계룡대, 군산, 동해측으로는 포항 이전까지 사거리에 들 수 있게 된다.

중요무기체계들의 대량생산체계 강조 의미,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 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목

이번 군수공장 현지지도 보도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중요 무기체계의 대량생산을 강조한 부분이다. 이번 보도에서 “제8차 대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제시된 군수생산목표의 성과적 달성…중요무기체계들의 생산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생산에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2023년 8월 10일 개최된 당중앙군사위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군의 작전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장비들의 대량생산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장장비 생산능력 조성 및 생산계획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핵심은 ‘대량생산’이다.

북한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 이후 그해 6월부터 ‘전쟁준비’와 ‘무기생산의 현대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여러 정황상 이때부터 북한 내부의 수요와 더불어 러시아에 공급할 무기를 위한 군수생산 총가동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남·대미 억제력 과시 및 대응을 위한 내부 필요에 따른 중요 무기 생산, 대러시아 및 해외 무기 수출을 위한 양산 필요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대량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이번 현지지도에서 중요무기체계들의 생산에서 “새로운 생산 기술 도입”, “생산공정 확립, 생산능력 확장, 혁신적 개진 현대화”를 강조한 것은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 공급 무기의 양산, 북한 내부 군수 수요에 필요한 양산체계를 갖추는 상호 윈-윈하는 기술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대한민국 주적 단정’ 첫 등장, 대남 초강경 대응 및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

지난해 연말 제8기 제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한과의 통일논의 포기, 남조선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며 적대적 교전국가라는 규정 이후 김정은의 직접 언급을 통해 “주적” 규정이 첫 등장했다. 김정은 언급을 통해 ‘주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남조선과 미국이 주적이 아니고 ‘전쟁이 주적’이라고 밝힐 때 사용했으나 맥락상 한국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이번 김정은의 주적 규정은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고 “피할 수도, 되돌려 세울 수도 없는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발언 맥락으로 볼 때, 대남 패러다임의 ‘전환’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직접 언급은 곧 당의 방침이자 정책 노선화된다는 점에서 향후 대남 초강경 행보가 군사를 비롯한 다양한 부서에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10월 금강산관광지구 현지 지도 당시 김정은이 남북한 교류협력을 국력이 약했던 시절 선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규정, 이후 대남부서 약화 및 대남 메시지가 돌변하며 지금까지 대결적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해 온 것의 연속선상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여 근본적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먼저 무력 사용을 한다는 조건부이지만, “대한민국 초토화”도 언급했다. 이 발언을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대차량 공장 현지지도를 하며 언급한 것은 유사시 한국 초토화에 이 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차원도 깔려 있다고 보인다.

향후 예상 행보

향후 북한의 대남 ‘주적화’ 행동 양상은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다. 우선 한국(한미)의 훈련이나 군사행동에 대한 비례적 또는 초과 맞대응 양상이다. 특히 2~4월, 8~9월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 등에 맞춰 ‘작전’ 개념의 공세적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훈련을 명분으로 전술핵무기 보유의 ‘비대칭성’을 과시하는 미사일 시위를 과감하게 벌일 가능성이 있다.

2022년 11월 북한은 처음으로 비질런트 스톱 한미공중연합훈련에 대응해 기존 훈련이 아닌 ‘작전’ 개념의 대응을 연쇄적으로 한 바 있다. 올해 8월 있을 한미연합훈련(UFS)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협의에 따라 핵작전 연습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 북한의 공세적 대응이 긴장의 파고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박정천을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으로 재기용한 것은 이것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긴장 조성을 위한 위협 시위용 훈련이나 무기 시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무기나 병력의 국지적 도발 보다는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고 한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대남 여론 조성, 심리전 차원에서 동·서해상에서의 시위성 위협 훈련을 빈번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무인공격기, 무인정찰기, 수중무기 등을 동원하여 한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 위협 시도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동서해 해안지대나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무인공격기를 동원한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에 인접시켜 시위성 정찰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이밖에 수중이나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이나 핵어뢰 등을 남쪽 특정 지점으로 발사하는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